

車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 美 시장 7개월째 역성장 ‘온도차’

산업부, 9월 자동차산업 동향

EU·아시아가 北美 부진 상쇄
전기·하이브리드 쌍끌이 호조
친환경차 수출 비중 40% 육박
10월 조업 감소·통상 불확실성

국내 자동차산업이 생산·내수·수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낮은 주석으로 조업일수가 늘고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역대 9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33만43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량은 15만 7898대(20.8% ↑), 수출량은 22만8153대(11.0% ↑)로 3개월 연속 동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역대 9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수출은 7.5% 감소한 23억7800만달러에 그치며 3월 이후 7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북미 전체 수출액(28억1300만달러) 역시 5.3%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52.8% ↑), 아시아(62.3% ↑), 중남미(36.4% ↑)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대미 부진을 상쇄할 부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차의 약진도 눈에 띈다. 9월 친환경차 수출은 9만496대로 전년 대비 47.5% 늘며 월간 첫 9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다. 수출액은 26억6800만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면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22.9% ↑)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차는 5만 7824대(55.7% ↑), 전기차는 2만9288대(38.9% ↑),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3384대(8.6% ↑)였다.

특히 전기차는 6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1~9월 누적 수출량도 20만대를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수준을 이미 추월했다.

내수도 견조한 흐름이다. 9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로 전년 대비 20.8% 증가, 지난해 11월(16만대)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8만2236대(40.5% ↑)로 급증하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전기차 내수판매는 2만8760대로 134.8% 급증, 역대 월간 최대치를 새로 썼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차 15만4283대(2.6%) ▲기아 13만7501대(30.0%) ▲한국지엠 2만4243대(-34.4%) ▲KG모

빌리티 1만1009대(51.6%) ▲르노코리아 6627대(6.5%) 등으로 집계됐다. 1~9월 누계 기준 생산량은 308만대(1.3% ↑), 수출액은 541억달러(2.2% ↑)다.

10월 이후는 조업일 수 감소와 대미 관세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수출이 일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북미 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연말 성수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자동차 업계는 철강과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탄소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추세로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주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10월 생산량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어촌공사, BF 인증기관 재지정

2028년 9월까지 인증 수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돼, 오는 2028년 9월까지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농어촌공사 등 11개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2년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3년부터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 정착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전담 조직 운영과 내부 전문가 양성으로 인증 역량을 높였다. 또 BF인증 해설서와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BF 개념 확산과 실무 적용을 도왔다.

이와 함께 2023년 서울 유니버설디자인어워드 대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연구원장상 2년 연속 수상 등 대외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돼 이번 재지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앞으로도 인증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고 위촉한 심사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인증 실적을 확대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장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공사는 BF 인증 업무와 더불어 농어촌 공간에서 차별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송미령 장관 “농산물 소비 확대 지원”

군수협의회와 농촌정책 협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에 참석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지역상생직판 개막 행사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역상생 가치 확산 등을 강조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와의 역할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 정책의 적시 이행을 위한 군수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강원랜드 슬롯수출 8년간 104억 적자

231억 쓰고 실적은 ‘제로 수준’
캄보디아 계약 불공정 논란
유령계약 의혹에 안전 우려까지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슬롯머신 수출 사업이 8년간 10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카지노 산업 수출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적은 부진하고 불공정 계약 논란까지 불거졌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슬롯머신 수출사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2022년 15억 원, 2023년 25억 원, 2024년 30억 원 등 최근 3년간 손실만 70억 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는 104억 원이다.

같은 기간 개발비·마케팅비·해외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231억 원.

매출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128대의 슬롯머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납품이 완료된 것은 71대뿐이다. 나머지 49대는 ‘납품 협의 중’으로 분류돼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논란은 캄보디아 수출 계약에서 더욱 커졌다. 김 의원의 질문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23년 11월 캄보디아 현지 카지노업체와 슬롯머신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수령 대상자는 강원랜드의 기술을 무료로 영구 사용한다”, “수령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가 전액 배상한다” 등 강원랜드의 지식재산권 포기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까지 명시돼 사실상 ‘유령계약’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구나 납품 예정지인 포이펏은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 지역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강원랜드는 앞서 2022년에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과 MOU를 체결했는데, 해당 지역 역시 범죄조직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해외계약’이 정권 행보에 맞춘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2022~2023년 캄보디아 계약 추진 시점은 영부인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방문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슬롯머신 수출사업은 심각한 적자에다, 정권의 보여주기식 유령계약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실패한 사업”이라며 “강원랜드는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순창·남해 등 7곳 2년간 지역상품권 지원

농식품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내 7개 군(郡) 거주민들이 향후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받는다. 기간은 내년 초부터 후년 말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따라 2년간(2026~2027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

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다. 이 중 7곳이 뽑혔다. 선정 기준은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